

---

# IV

##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1. CBDC 사업추진 강화	49
2.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추진	55
3.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	58



## 1. CBDC 사업 추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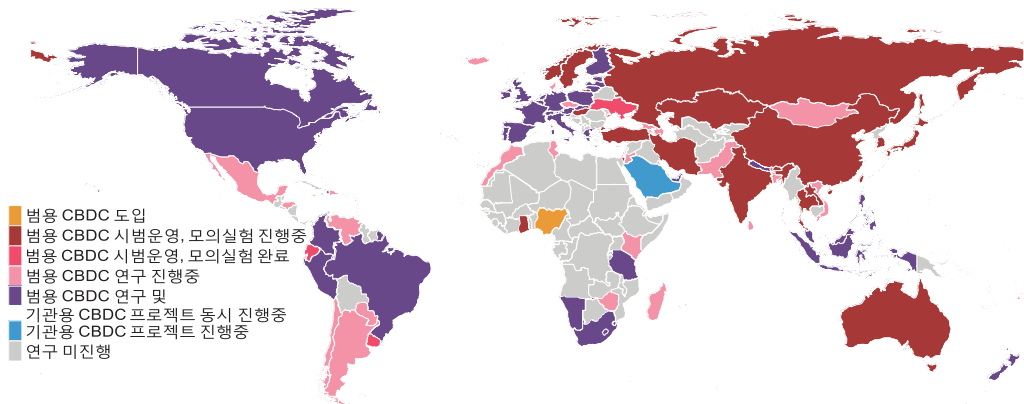
- 지급결제 환경 변화 및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 강화
-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 범용 CBDC 기술 연구 고도화
-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
- 국제기구, 해외 중앙은행 등과의 협력 확대

### 지급결제 환경 변화 및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2010년

대 후반부터 현금 이용 감소세 지속,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CBDC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먼저 각종 페이 서비스 등 민간의 지급서비스 발달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확대에 의해 현금 이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중앙은행의 화폐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sup>2)</sup>이 높아졌다. 아울러 빨라지고 있는 경제·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지급결제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CBDC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확산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sup>2)</sup>의 확산 가능성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sup>3)</sup>가 커짐에 따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CBDC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그림 IV-1. 전 세계 CBDC 연구·개발 현황(2023.7월)



자료: BIS(2023)

- 1) 현금 이용이 현저히 감소하여 중앙은행 화폐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 통화시스템의 근간이 사라져 현금을 토대로 한 현행 지급결제제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Lagarde and Panetta, Key objectives of the digital euro, ECB Blog, 2022.7월).
- 2)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가 통화, 상품 등의 준비자산을 보유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암호자산을 말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 여타 암호자산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낮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보관 및 거래가 용이해 지급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3)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의 안정성을 100% 담보할 수 없어, 충분한 규제 검토 없이 일상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금융 불안정,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 등 다양한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CBDC는 활용범위 및 사용 주체에 따라 범용(retail)<sup>4)</sup>, 기관용(wholesale)<sup>5)</sup>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연례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91개국 중앙은행에서 CBDC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특히 미국, 유로 지역,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다양한 설계모델에 기반한 CBDC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CBDC 관련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CBDC에 대한 기술 및 법·제도적 이슈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

#### 그림 IV-2. 한국은행의 CBDC 관련 연구 현황



자료: 한국은행

####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2023년 10월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금융시장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 디지털통화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은행은 BIS와의 협력을 통해 기관용 CBDC가 중심이 되어 예금 토큰(tokenized deposits), 이머니 토큰(tokenized e-money)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수단을 아우르는 새로운 미래 금융시장인프라 설계모델(CBDC 네트워크)을 제시했다.<sup>10)</sup>

#### 그림 IV-3.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회견(2023.10.4일)



자료: 한국은행

이번 테스트에서는 CBDC 네트워크를 시범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

- 4)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게,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직접 발행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말한다.
- 5) 지급준비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발행되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CBDC를 말한다.
- 6) 자세한 내용은 「Making headway - Results of the 2022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crypto」(BIS, 2023.7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 7)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2022.1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 8)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2022.11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 9)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 실험 결과」(2023.5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 10) 자세한 내용은 <참고 IV-1> 「CBDC 활용성 테스트 관련 시스템 설계구조」를 참조하기 바란다.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실거래 테스트와 함께 가상환경에서 미래 금융시장인프라의 구축 방안을 미리 점검해보는 기술실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실거래 테스트는 최대 10만 명의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디지털화폐의 프로그램 기능을 통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로 이용해 보게 된다.<sup>11)</sup> 이와 함께 가상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고 결제리스크를 감축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23년 10월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소배출권 시장’을 기술 실험대상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림 IV-4. 한국은행-한국거래소 업무협약 체결 (2023.10.30일)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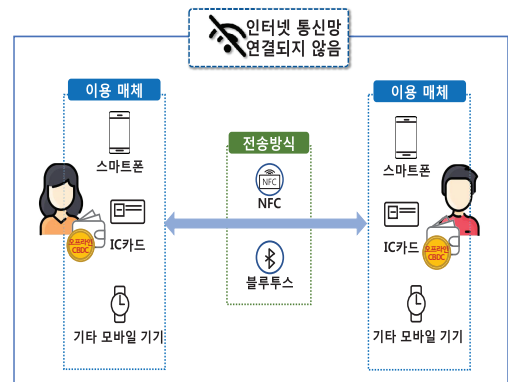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실거래 테스트 등 활용성 테스트 실시 범위와 관련된 법·제도 이슈들에 대해 면밀히 논의했다. 테스

트 참여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한정하고 실거래 테스트는 예금 토큰을 활용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테스트가 현행법 및 금융규제의 틀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행의 예금 토큰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sup>12)</sup>, 거래의 법적 효력<sup>13)</sup>이나 이용자 재산권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범용 CBDC 기술 연구 고도화

한국은행은 CBDC 활용성 테스트와 병행하여 오프라인 결제<sup>14)</sup>, 개인정보 보호 등을 중심으로 범용 CBDC 관련 핵심 기술 연구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그림 IV-5. 오프라인 CBDC 거래방식 개요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2023년 5월 삼성전자와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통신

11) 실거래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및 참가 이용자는 추후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의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12)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참가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CBDC 활용성 테스트가 현행 금융제도의 틀 내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3) 거래의 법적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테스트는 분산원장의 기록과 은행의 장부 기록을 1:1로 실시간 연계(mirroring)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14)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용 CBDC를 이용해 송금 및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망 장애, 재해 등으로 민간의 지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용 CBDC가 실물 화폐와 더불어 대체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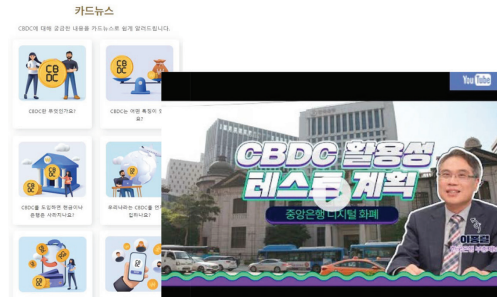
##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강화

한국은행은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CBDC 도입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확대했다. CBDC와 예금 토큰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sup>15)</sup>, 2023년 10월에는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사법학자대회」를 개최하여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CBDC의 사법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디지털금융에 관해 논의하는 「Money & Banking 미래 포럼」의 민간전문가 자문위원단으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CBDC에 관한 법·제도·기술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아울러 CBDC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여 경제주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CBDC 웹페이지를 신규로 개설하고 기존에 작성된 자료들을 취합 및 공개하여 CBDC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한 CBDC 관련 카드뉴스 6편과 해설 동영상 2편을 제작하여

CBDC 웹페이지와 한국은행 공식 SNS 등에 게시했다.<sup>16)</sup>

그림 IV-6. CBDC 카드뉴스 및 해설 동영상



자료: 한국은행

## 국제기구, 해외 중앙은행 등과의 협력 확대

한국은행은 그간의 CBDC 관련 연구 결과를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확대했다. 2023년 5월에는 CBDC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인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sup>17)</sup>과 디지털 바우처 관련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백서 작성에도 참여<sup>18)</sup>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2023년 11월 Agustín Carstens BIS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Carstens 사무총장은

15) CBDC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중앙은행 화폐이다. 한편,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예금 토큰(발행은행은 기관용 CBDC를 이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 보유)은 현행 예금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예금에 준하는 규제 적용 및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6)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금융안정 - 지급결제 - CBDC'와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의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화폐', 'CBDC 활용성 테스트' 영상을 참조하기 바란다.

17) MAS는 Project Orchid를 통해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기능이 내장된 용도 제한 화폐(PBM, Purpose Bound Money)에 대해 연구하는 등 다양한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8) 자세한 내용은 MAS의 「Purpose Bound Money(PBM) Technical Whitepaper」(2023.6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기조연설을 통해 CBDC, 예금 토큰 등으로 구성된 미래 통화 시스템이 지향해야 하는 비전과 앞으로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한국의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이러한 비전에 다가서기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했다.<sup>19)</sup>

2023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Digital Money: Navigating a Changing Financial Landscape)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CBDC 연구 개발 현황, 의의 및 향후 과제 등을 소개했다. 동 국제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최고위급 패널토론의 참석자들은 기관용 CBDC와 토큰화 기술이 국가 간 지급시스템 개선 및 금융 포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sup>20)</sup>

아울러 BIS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CBDC 및 토큰화 등을 활용해 국가 간 지급서비스를 개선하는 프로젝트(Project Mandala 및 Project Agorá)를 진행하고 있다.<sup>21)</sup>

그림 IV-7. BIS 사무총장 초청 세미나(2023.11.23일)



자료: 한국은행

그림 IV-8. 2023 MOEF-BOK-FSC-IMF 공동 국제컨퍼런스(2023.12.14~15일)



자료: 한국은행

19)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은행, Agustí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초청 세미나 개최」(2023.11월)와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의 'Agustí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초청 세미나' 영상을 참조하기 바란다.

20)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은행 총재,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연설 및 패널토론 참석」(2023.12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컨퍼런스에서는 지급수단의 토큰화 외에 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최근 우리나라의 토큰 증권 동향과 관련한 내용은 <참고 IV-4> '국내 토큰 증권 논의 및 규제 방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자세한 내용은 <참고 IV-2> 'Mandala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참고 IV-3> 'Agorá 프로젝트 추진'을 참조하기 바란다.

## QR BOX



### QR 1

보도자료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 QR 2

보도자료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 QR 3

보도자료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 실험 결과」



### QR 4

영상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화폐」



### QR 5

영상 「CBDC 활용성 테스트」



### QR 6

보도자료 「한국은행, Agustí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초청 세미나 개최」



### QR 7

영상 「Agustí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초청 세미나」



### QR 8

보도자료 「한국은행 총재,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 연설 및 패널토론  
참석」



### QR 9

영상 「2023 MOEF-BOK-  
FSC-IMF International  
Conference」

## 2.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추진

-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패러다임이 DNS 방식에서 RTGS 방식으로 전환
- 주요국 중앙은행의 운영 경험 공유 및 전문 기관 컨설팅 실시
- 금융기관 의견 수렴

###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패러다임이 DNS 방식에서 RTGS 방식으로 전환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수취인의 자금수취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서비스를 연중무휴(365일, 24시간) 제공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세계 최초로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을 통해 다량의 소액 고객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전자금융공동망<sup>22)</sup>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이후 2004년에는 CD공동망<sup>23)</sup>의 운영시간을 연중무휴로 확대함으로써 신속자금이체서비스의 범위를 CD/ATM을 통한 고객자금이체로 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2016년에는 오픈뱅킹공동망<sup>24)</sup>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신속자금이체서비스 범위를 핀테크 관련 고객자금이체 등으로 까지 확대했다.

- 22) 전자금융공동망의 처리규모는 팬데믹 이후 비접촉·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신속지급 수요의 성장에 힘입어 2019년 중 일평균 1,424만 건, 55조 원에서 2023년 중 일평균 2,394만 건, 84조 원까지 성장했다.
- 23) CD공동망의 처리규모는 국민들의 현금이용 감소 추세 등이 반영되어 2019년 중 일평균 155만 건, 8천억 원에서 2023년 중 일평균 89만 건, 5천억 원까지 감소했다.
- 24) 오픈뱅킹공동망의 처리규모는 핀테크를 통한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 등으로 2019년 중 일평균 95만 건, 0.2조 원에서 2023년 중 일평균 631만 건, 1.7조 원 수준까지 증가했다. 전자금융공동망이 기업고객의 자금이체 등 상대적으로 고액의 자금이체도 처리하는 반면 오픈뱅킹공동망은 대상거래가 개인고객의 자금이체로 한정되어 있어 처리건수에 비해 처리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
- 25) 현재 전자금융공동망 등 국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경우 고객 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수취인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으나, 한은금융망을 통한 참가기관 간의 최종결제는 고객 간 자금이체에 따라 참가기관 간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한 차액만을 다음 영업일의 지정시점(11시)으로 이연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국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이 채택하고 있는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sup>25)</sup> 방식은 지급인의 거래은행이 실시간 결제를 위해 적정 수준의 결제유동성을 상시 유지·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자금이체 일의 익영업일에 처리하는 차액결제 시점까지 수취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지급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에 내재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참가기관으로부터 국채, 통안증권 등을 담보로 받고 있다.

표 IV-1.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납입규모

	(%, 조 원)			
	2010년말	2020년말	2023년말	2025년말 <sup>1)</sup>
담보제공 비율	30	50	80	100
담보납입 규모	10.9	30.8	82.2	97.1

주 : 1)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가 현행과 동일하고 담보제공비율은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되었다고 가정  
자료: 한국은행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처리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차액결제 신용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 규모도 확대되었다. 2023년 말 기준 참가기관이 차액결제와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한 담보는 82.2조 원인데, 이는 2025년 말 97.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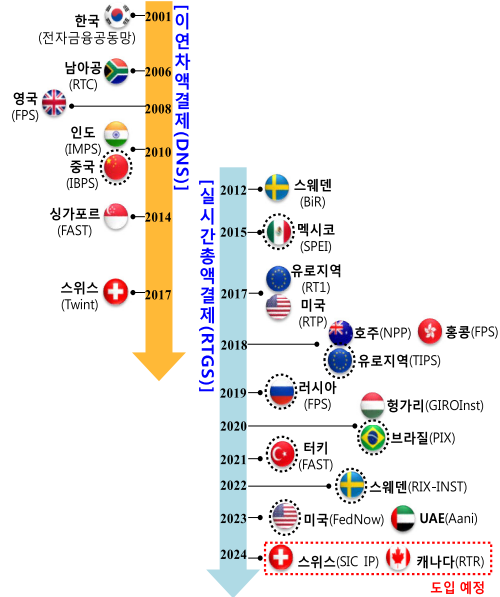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절감 및 관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차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선호되었다.<sup>27)</sup> 그러나 IT 기술의 발달로 다량의 소액자금에 대한 지급 및 결제가 건별로 동시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용이해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주요국에서 구축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대부분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을 채택하는 등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결제 패러다임이 DNS 방식에서 RTGS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sup>28)</sup> 2012년 스웨덴이 가장 먼저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현재까지 10여 개 국가가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sup>29)</sup>

이처럼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 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연계가 RTGS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간 최종결제 방식이 상이할 경우 국가 간 연계 시 상호운영성 확보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가 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연계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 IV-9. 결제방식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현황<sup>1)</sup>



주: 1) 검은색 점선 테두리는 중앙은행이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국가. ( ) 내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명칭  
자료: 각국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 주요국 중앙은행의 운영 경험 공유 및 전문 기관 컨설팅 실시

한국은행은 국내 지급결제 환경에 부합하는 IT 시스템 설계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외부 IT 전문 기관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RTGS 신속자금이

26)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방식으로 처리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해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이체의 순한도를 미리 설정하도록 하고, 동 한도의 80%에 해당하는 담보증권을 한국은행에 납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동 담보제공비용을 2025년 8월 100%를 목표로 매년 10%포인트씩 순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7)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 방식으로 차액결제 방식을 채택했으며, 이후 영국(2008년), 싱가포르(2014년), 스위스(2017년) 등이 차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했다.

28) BIS는 국제사회의 신속자금이체 결제방식이 RTGS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급결제시스템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Developments in retail fast payments and implications for RTGS systems」(BIS, 2021.12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29) 스위스와 캐나다는 2024년 가을을 목표로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

체시스템을 도입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세미나를 통해 구축 및 운영 경험 등을 상호 공유했다.<sup>30)</sup> 향후 이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IT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림 IV-10.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관련 미 연준과의 세미나(2023.12.19~20일)



자료: 한국은행

또한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 선진국들과 글로벌 상업은행들이 활발히 논의 중인 국가 간 지급시스템 연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호운영성 확보 차원에서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전문 양식에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을 적용할 예정이다.

### 금융기관 의견 수렴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한국은행은 물론 참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필요로 하는 데다 결제유동성 관리 방식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기관들은 DNS 방식의 신용리스크 감축 및 담보납입부담 해소 등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실시간 결제에 따른 결제유동성 유지·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30) 2022년 중 스웨덴중앙은행(2022.9월), 호주중앙은행(2022.9월), 유럽중앙은행 및 이탈리아중앙은행(2022.11월)과 세미나를 실시했으며, 2023년에는 헝가리중앙은행(2023.10월), 미 연준(2023.10월, 12월)과 세미나를 실시했다.

### 3.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

- 국가 간 금융전문 상호운영성 제고 필요
- 국제기구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ISO 20022 기반 한은금융망 통신 전문 개발

#### 국가 간 금융전문 상호운영성 제고 필요

글로벌 교역 및 금융거래 확대, 해외거주자 증가 등으로 해외송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효율적인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비싼 수수료, 느린 처리 속도 등의 문제점<sup>31)</sup>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최우선 협력과제로 선정했고, 금융안정위원회(FSB)와 BIS 등 관련 국제기구가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체계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sup>32)</sup>을 마련하여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 함께 이행해가는 중이다.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간 송·수신 등 금융전문 체계인 ISO 20022 도입은 지급결제업무의 글로벌 상호운영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개선과제 중 하나이자 동시에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등 여타 개선과제들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주요국들은 현재 거액결제시스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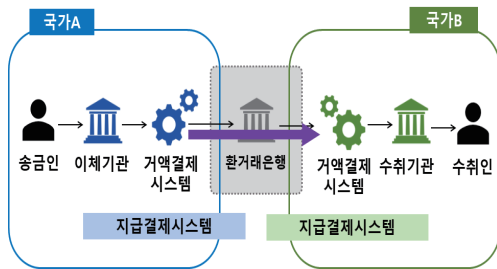
에 ISO 20022 체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V-2.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 ISO 20022 도입 현황(계획)

2023	2024	2025	2026
영국 CHAPS 호주 HVCS	-	미국 Fedwire 일본 BOJ-NET <sup>1)</sup>	한국 한은금융망

주: 1) 2015년 기도입했으나, 버전 3에서 버전 8로 업데이트할 계획

그림 IV-11. ISO 20022 전문을 통한 국가 간 지급(예시)<sup>1)</sup>



주: 1) 송·수신기관(시스템) 간 전문 변환 작업, 데이터 손실 최소화  
자료: 한국은행

한편 이러한 ISO 20022 도입이 개별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부 세부 전문양식이나 정보항목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경우<sup>33)</sup>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2023년 10월에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ISO 20022 공통 요구사항’을 마련·권고했으며 한국은행을 포함한 대다수 회원국들도 2027년까지 동 사항들을 관련 지급결제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ISO 20022가 도입되면 국가 간 통일된 전문양식, 유연하고 확장성 높은 전문체계 등으로

31) 이는 다수의 중개기관(환거래은행 등) 개입, 복잡한 통화 환전(FX) 절차, 자금세탁/테러자금방지 준수, 표준화되지 않은 금융통신전문체계, 제한된 지급시스템 운영시간 등에 주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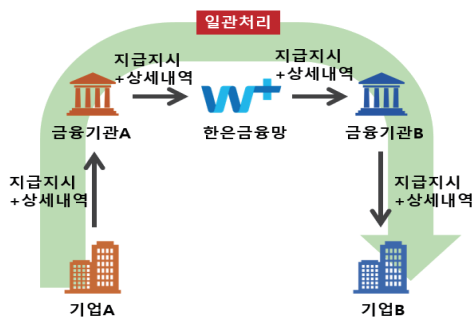
32) 일관되고 포괄적인 자금세탁/테러자금방지 준수, 외환동시결제 활성화,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ISO 20022 체계 도입 등 19개 개선과제가 선정되어 있다.

33) 자세한 내용은 <참고 IV-5> ‘BIS CPMI의 ISO 20022 공통 요구사항 보고서 발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기술적인 호환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운영성의 제고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 연계, 금융기관 해외 진출 등이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급 인프라(또는 기관) 간 상이한 전문체계 사용에 따른 전문 변환과정의 비효율성, 데이터 손실 등이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다. 또한 ISO 20022는 정보의 추가·삭제 및 구조화가 용이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sup>34)</sup> 기반의 전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역거래와 관련한 자금이체 시 송금에 필요한 정보 외에 무역거래에 관한 세부정보 등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ISO 20022의 특징은 송금인에서 최종 수취인에 이르는 지급 프로세스의 일관처리(STP, Straight Through Processing)<sup>35)</sup>를 용이하게 하여 국제금융거래의 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무역업무와 금융업무 간 유기적 연계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V-12. 일관처리되는 ISO 20022 전문 전달 과정(예시)<sup>1)</sup>



주: 1) 기업A와 기업B 간 e-mail 등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관련 상세 정보 송수신, 대사 작업 등 불필요(거래 시간·비용 절감)  
자료: 한국은행

34) 기존 텍스트 기반 전문과 달리 데이터의 성격을 표현하는 Tag와 데이터를 함께 표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시작과 끝 Tag(예: <Name>한은</Name>), 하위 Tag 등을 사용하여 전문 내용을 만들기 때문에 정보 확장(데이터 추가 또는 제거 등)과 데이터 구조화(체계화된 항목별 필드 사용 등)가 용이하다.

35) 송금인이 지급지시 정보(금액, 수취인 이름·계좌번호·주소 등)를 지급은행에 송신하면 지급은행 및 수취은행의 별도 가공 처리 없이 동 지급지시가 그대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V-13. ISO 20022의 확장성(무역 거래정보 기재 예시)

```
<RmtInf> ← Remittance Information 항목
<Strd> ← 구조화된 정보로 작성
<RfrdDocInf>
  <Tp><CdOrPrty><Cd><CINV</Cd></CdOrPrty></Tp> ← 서류 유형: Commercial Invoice
  <Nb>20230119-1072</Nb> ← 서류번호
  <LineDtls>
    <Desc>Gemstone Grade 2, Jan 2023 shipment</Desc> ← 상세내용
  <Amt>
    <AdjstmntAmtAndRsn> ← 조정 금액 및 사유
    <Amt>KRW30000000</Amt> ← 조정 금액: 3천만원
    <CdtDbtInd>DBIT</CdtDbtInd> ← 구분: 차감
    <Rsn>Incomplete shipment</Rsn> ← 사유: 적재량 부족
  </AdjstmntAmtAndRsn>
  <RmtdAmt>KRW270000000</RmtdAmt> ← 송금금액 27억원
```

자료: 한국은행

또한 송금인, 수취인에 대한 정보 등을 보다 다양하고 상세하게 포함시킬 수 있어 자금세탁방지 등 국제송금 관련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기구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ISO 20022 기반 한은금융망 통신 전문 개발

한국은행은 2022년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대한 ISO 20022 도입 사업에 착수했다. 2023년에 일반자금이체, 수취인지정자금이체, CLS 결제 등 핵심 자금이체에 대한 전문 개발을 완료했다. 또한 국가 간 통일성 있는 ISO 20022 도입을 위해 BIS CPMI 공통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문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동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한국은행과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시스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증권대금동시결제, 콜거래에 대한 ISO 20022 도입 여부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 전후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 참고 IV-1.

### CBDC 활용성 테스트 관련 시스템 설계구조

한국은행이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을 위해 설계한 CBDC 네트워크는 CBDC 시스템과 외부 연계 시스템의 두 가지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동 네트워크 내에서는 기관용 CBDC와 함께 세 가지 종류의 민간 디지털통화가 발행·유통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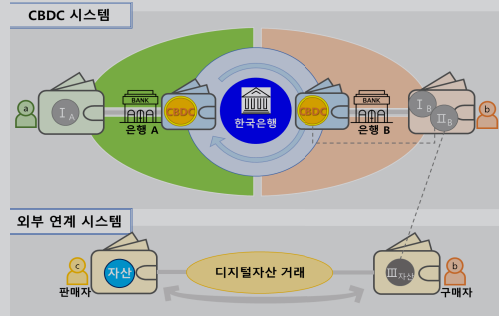
첫째, CBDC 시스템은 기관용 CBDC와 이와 연계된 디지털통화 I형, II형이 발행·유통되는 플랫폼으로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허가받은 민간기관만 참여할 수 있는 분산원장 구조로 설계했다.

기관용 CBDC는 한국은행이 CBDC 시스템 참가가 허용된 금융기관에만 발행하여 은행 간 결제 등에 사용된다. I형 통화는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으로 현행 예금과 유사<sup>1)</sup>하며, 실거래 테스트를 위해 제한적으로 실제 발행될 예정이다. II형 통화<sup>2)</sup>는 이머시 토큰으로 발행기관은 발행액 전액에 상응하는 기관용 CBDC를 담보로 보유해야 한다.

둘째, 외부 연계 시스템은 특정한 디지털자산이 발행·유통되는 별도의 플랫폼으로, 해당 디지털자산 거래 시 대금 지급용으로 사용되는 디지털통화 III형<sup>2)</sup>이 발행·유통된다. III형 통화는 II형 통화를 100% 담보로 하여 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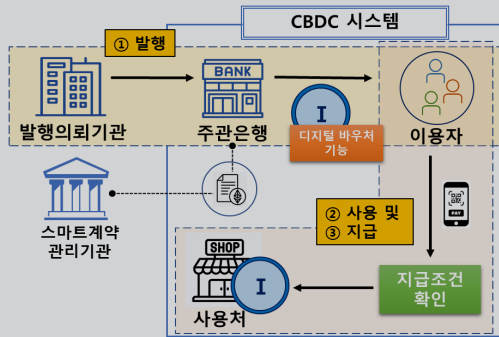
한편 I형 통화와 연계하여 진행될 디지털 바우처 기능 관련 테스트 시스템은 ① 발행의뢰기관의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②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③ 사용처 앞 대금이 지급되는 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스마트계약 관리기관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 관련 스마트계약 표준 규격을 개발하고 안정성 검증 체계 등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CBDC 네트워크 구성도(안)



자료: 한국은행

####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활용한 테스트 시스템 구성(예시)<sup>1)</sup>



주: 1) 실제 테스트 시스템 구성은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위 방식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1) 현행 지급준비금 제도와 같이 은행이 I형 통화 발행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용 CBDC 준비금으로 보유하게 되고 타행 간 이체 시 소각 및 재발행(burn & issue) 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소각 및 재발행은 송금인과 수취인이 사용하는 통화의 발행기관이 다를 때 송금인 계좌에서 송금은행의 통화를 차감하고 수취인 계좌에 수취은행의 통화를 새롭게 발행하는 방식이다.  
2) II형 통화와 III형 통화에 대해서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실험만 진행할 예정이다.

## 참고 IV-2.

### Mandala 프로젝트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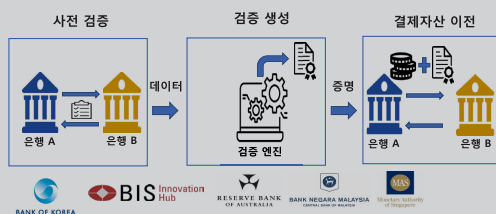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2023년 10월 BIS 혁신허브<sup>1)</sup> 싱가포르센터, 호주 및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과 함께<sup>2)</sup> CBDC 등을 활용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노력의 일환인 Mandala 프로젝트에 공식 착수했다.

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는 그간 Dunbar 프로젝트<sup>3)</sup>를 수행한 결과 CBDC를 활용한 공동 플랫폼을 이용하여 국가 간 지급시 국가별로 상이한 제도 및 규제가 마찰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가 간 지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개별국가의 제도 및 규제 사항을 공동 플랫폼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는지를 개념증명(proof of concept) 방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새로이 Mandala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Mandala 프로젝트는 국가 간 지급과 관련한 일련의 제도 및 규제, 정책관련 사항을 공동 플랫폼에 내재화하는 프로토클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기존 지급 거래의 중간단계에서 수행하던 규제검증을 수취인, 수취금액 등 지급정보 입력 단계에서 사전에 공유된 검증항목을 활용하여 점검한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지급의 일관처리 비율 향상, 고객정보요청의 간소화, 중복점검 문제 해결 등이 가능한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전 검증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수취인, 송금목적, 송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Mandala 플랫폼의 검증 엔진은 이 정보를 이용해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 등의 제재대상 여부, 자본이동통제 정책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생성한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스마트계약 등을 통해 CBDC, 예금 토큰 또는 기존 시스템으로 결제수단 등과 함께 이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동시에 처리되면서 지급거래 속도가 빨라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국가 간 지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Mandala 프로젝트 구조



자료: 한국은행, 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 호주중앙은행, 말레이시아중앙은행, 싱가포르통화청

2023년 11월 현재 한국은행은 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 및 참가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첫 번째 활용 사례<sup>4)</sup>를 개발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동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가 활용사례 개발 등을 통해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효율화와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1) BIS가 금융분야 혁신에 대한 효율적 연구 수행을 위해 2019년 설립했으며 현재 유로시스템, 홍콩, 런던, 북유럽, 싱가포르, 스위스 센터 등 총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토론토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 2) 이 밖에도 프랑스, 태국, 인도 중앙은행 등이 참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중은행도 기술적 조언자로 참여하고 있다.
- 3) BIS는 2021년 9월 호주,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 4개국 중앙은행과 함께 국가 간 거액지급의 속도, 비용 및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복수통화 CBDC가 유통되는 단일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Dunbar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2022년 3월 해당 플랫폼 운영 관련 기술적, 제도적 이슈와 플랫폼 설계 및 지배구조에 대한 분석 등을 수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4) 첫 번째 활용사례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할 때 적용되는 규제 및 정책을 플랫폼을 통해 자동화하는 것이다.

## 참고 IV-3.

### Agorá 프로젝트 추진

2024년 4월, 한국은행은 BIS, 주요국 중앙은행(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멕시코)과 함께 아고라(Agorá<sup>1)</sup>)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예금을 토큰화<sup>2)</sup>(예금 토큰)하여 통화시스템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속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낮추는 연구를 우선 추진한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unified ledger)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통합원장은 토큰화된 화폐와 토큰화된 자산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공통 플랫폼상에 발행·유통되는 새로운 금융시장인프라를 뜻하며<sup>3)</sup>,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예금에 기반한 기존 2계층 통화시스템<sup>4)</sup>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토큰화의 장점<sup>5)</sup>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아고라 프로젝트에서는 토큰화된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예금이 플랫폼에서 원활히 통합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토큰화 및 스마트계약을 통해 현재

는 비실용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예금 토큰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관용 CBDC만을 활용해왔던 그간의 CBDC 기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와 차별화된다. 또한, 금융무결성<sup>6)</sup> 확보를 위한 중요 절차를 수행하는 환거래은행의 역할을 유지하는 등 현행 시스템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민간은행이 활용사례 발굴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실제로 아고라 프로젝트는 BIS 혁신허브 사업 중 최대 규모의 민간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 프로젝트로, 참가국별로 수 개의 민간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고라 프로젝트에 한국은행이 참여하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무역국 중 하나임에 따라 국가 간 결제 수요가 커 활용사례 발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미 BIS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원장 개념의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sup>7)</sup> 주요국 포함 다양한 경제권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초기부터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주요 중앙은행 및 글로벌 상업은행과의 공동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국내은행의 글로벌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그리스어로 광장, 시장을 뜻한다.

2) BIS는 토큰화를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 전통적인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상에 기록할 수 있는 디지털 증표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3) 자세한 내용은 BIS의 연례경제보고서(Annual Economic Report) 「Blueprint for the future monetary system: improving the old, enabling the new」(2023.6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4) 오랜 금융의 역사를 통해 확립된 중앙은행-상업은행의 이중구조로, 은행은 고객에게 예금을 발행(계좌 제공)함으로써 개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은행은 은행에게 예금의 지급준비 및 은행 간 자금이전을 위해 사용되는 지급준비금을 발행(계좌 제공)함으로써 통화시스템 전체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말한다.

5) 화폐와 자산을 토큰화하면,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 과정을 마치 하나의 거래처럼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6) 금융 거래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법과 윤리기준을 준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7) 「IV.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 1. CBDC 사업 추진 강화 >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을 참조하기 바란다.

## 참고 IV-4.

### 국내 토큰 증권 논의 및 규제 방향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화된 증권을 의미한다.<sup>1)</sup> 토큰이라는 형태의 특성상 자산의 거래단위 분할과 이전이 용이하여 다양한 소액투자 수요를 충족하고 비정형적 권리의 유통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up>2)</sup>

지난 2023년 2월 정부는 현행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허용하기 위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sup>3)</sup>했다. 동 정비방안은 토큰 증권의 본질이 증권이므로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 일반 증권과 동일한 공시, 인·허가, 불공정거래 방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증권성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권리의 내용이 증권에 해당하면 토큰 증권으로서 현행 증권 관련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증권의 형태로 토큰 증권을 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공적 장부로 인정할 계획이다. 유통시장에서는 비정형 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장외시장)을 신설하고 한국거래소에 신종증권 시장(장내시장)을 개설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비방안 발표 이후 증권사들은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동 정비방안이 입법화될 경우 증권사들은 토큰 증권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장외거래중개업자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증권사의 주요 토큰 증권 관련 협약 및 투자 현황

증권사	분야	협약 및 투자내용
A증권	부동산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사업 공동 추진
	미술품	미술품 조각투자 서비스 공동개발 추진
	플랫폼	토큰 증권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협업
B증권	고가 수집품	플랫폼 공동개발 및 운영 참여
	선박금융	계좌관리기관 역할 수행
C증권	블록체인	기술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도입
	부동산	제휴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자료: 각 사 홈페이지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은 부동산, 미술품 등 자산의 유통화를 중심으로 한 조각투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각투자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될 경우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목적의 각종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미국<sup>4)</sup> 등 주요국도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토큰 증권을 제도권에 포함하는 모습이다.

토큰 증권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므로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취약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자산 중 고위험 비유량자산의 유통 등과 관련하여 잠재리스크가 없는지 살펴야 하겠다.

1) 본 참고에서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 및 토큰화의 경우에 한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2023.2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3) 정부의 정비방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2023.7월)되어 2024.3월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9년 발표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계약 분석 개요」(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에 따라 토큰 증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

## 참고 IV-5.

### BIS CPMI의 ISO 20022 공통 요구 사항 보고서<sup>1)</sup> 발표

현재 주요국은 자국의 지급결제 인프라에 ISO 20022 체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ISO 20022를 기반으로 하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고유한 지급결제 여건, 업무처리방식 등을 반영하다 보니 전문의 일부 세부항목에서 국가 간 차이가 발생했다. BIS CPMI가 주요국이 사용하는 ISO 20022 전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동일한 자금거래에 상이한 전문양식 사용, 필수항목의 불일치 등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착오 등으로 잘못 송금 처리된 자금을 반환하려는 경우 국가마다 ISO 20022 전문 중에 자금반환신청 전문(pacs.004)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통상적인 일반자금이체 전문(pacs.009)을 반환거래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혼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BIS CPMI는 2023년 10월 국가 간 지급업무에 쓰일 ISO 20022 전문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회원국들이 2027년까지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권고한 공통 요구사항이 각국의 지급결제인프라에 충실히 반영되어 국가 간 통일성 있는 ISO 20022 도입이 이루어질 경우 최초 송금인부터 최종 수취인까지(End-to-End)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전 단계에 걸쳐 개별 인프라들이 사용하는 통신전문 간 호환성이 더욱 높아지며 상호운영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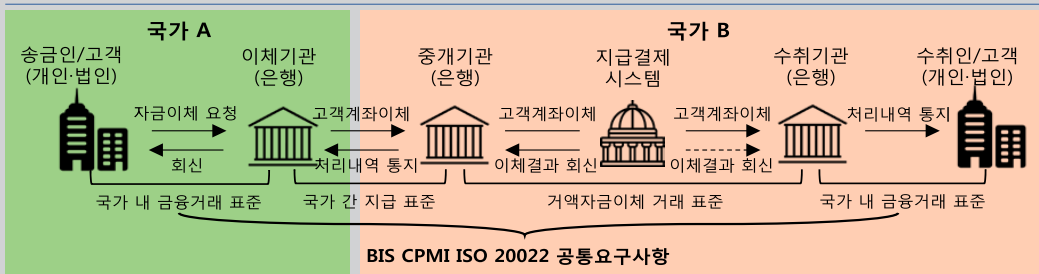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BIS CPMI의 공통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며<sup>2)</sup>, 동 사항들까지 모두 반영하여 2026년 말까지 한은금융망(BOK-Wire+)에 ISO 20022 적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 BIS CPMI의 ISO 20022 공통 요구사항 주요 내용

- ① 업무유형별 적절한 ISO 20022 전문양식의 사용
-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동표준코드의 사용 확대
- ③ 전문에 기재하는 문자(character)로 알파벳과 숫자를 사용
- ④ 협정세계시(UTC<sup>3)</sup>) 등 공통시간대로 표기
- ⑤ 글로벌 고유전문식별번호(UETR<sup>2)</sup>) 사용
- ⑥ 송금 수수료 정보의 상세한 기재
- ⑦ 수취인의 계좌정보를 상세히 기재
- ⑧ 지급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금융기관 기재(BICFI, LEI<sup>3)</sup> 등 국제식별기호 사용)
- ⑨ 지급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법인 기재(법인명, 소재지 등)
- ⑩ 지급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기재(이름, 거주지역 등)
- ⑪ 구조화된 주소정보를 사용
- ⑫ 송금 세부정보(거래송장번호 등)를 자금의 최종 수취인까지 누락없이 전달

- 주: 1) Universal Time Coordinated  
 2) Unique End-to-End Transaction Reference: 난수표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16자리 고유번호  
 3) Legal Entity Identifier: 거래상대방 식별을 위해 모든 법인에게 부여되는 20자리 고유기호

#### ISO 20022 공통 요구사항 반영 후 국가 간 지급서비스 프로세스



자료: BIS CPMI(2023)

1) 「Harmonised ISO 20022 Data Requirements for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BIS CPMI, 2023.10월)  
 2) CPMI 회원국인 영국, 유럽, 미국, 중국, 호주 등의 중앙은행들도 CPMI의 공통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